

- 공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과도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을 제한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증가와 같은 경영비효율이 단기적인 부채 증가와 관련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영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필요 있음

주제 발표2

상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박한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연구팀장),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과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등의 논의와 연계하여 OECD를 중심으로 상장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대부분 주요국의 경우 상장 공기업의 비중은 전체 공기업의 약 20~40% 수준이며, 규모로는 5개 이하가 대부분임
 - 우리나라는 8개, 이탈리아 7개, 폴란드 6개이며, 중국과 인도가 각각 286개, 68개로 상장공기업 규모가 큼
- 우리나라에서 상장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가 직접 배당을 받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배당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구분
 - 중앙정부가 직접 배당을 받는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은 상장이후 수익성 목표와 공익성 목표의 충돌, 소액주주 소송, 경직된 수익구조, 제한된 자율경영성 등 한계를 표출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배당을 받는 공공기관(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은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실현보다는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분 소유여부에 따른 배당성향 차이가 있음
- 공공기관의 상장이 민영화에서 출발했지만, 상장과 민영화를 동의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민영화를 추진하다 중단된 것이 문제를 발생시킴
 - 공공기관 상장기준 등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의 안정성 강화, 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평가의 간소화와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 격차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높은 인적 자본을 가진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원인을 분석
 - 공공기관의 고용 및 임금 안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고용안정성과 임금 안정성을 고려한 기대 임금 수준 추정을 통한 기대 임금 프리미엄 추정

- 개별 특성과 사업체 규모를 통제할 경우에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으나, 높은 임금수준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에 많이 유입
 - 공공기관의 특성상 고용과 임금 산정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높음
 - 고용과 임금 안정성으로 인해 동일 조건에서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유입

토론 및 마무리

- (주제발표1) 국민 누구도 공공기관이 파산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증가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때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공공기관이 사업을 많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하여 구분회계의 필요성이 있음
 - 복리후생비가 기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으므로, 복리후생비와 부채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주제발표2) 공공기관은 상장이 되어도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차이가 있음.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상장 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공익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상장된 공공기관의 경우 이윤이 나더라도 소액주주인 국민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인 정부의 이익을 우선하여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해소하여 주가가 상승하지 않음. 정부가 공공

기관을 상장함에 있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함

- (주제발표3) 공공기관의 특성상 고용과 임금 산정에 있어서 정부통제를 민간기업에 비해 많이 받기 때문에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높다는 결론에 대해, 공공기관의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높은 것은 정부의 통제보다는 시장퇴출의 압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봄. 후속연구로 공공기관의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와 시장퇴출의 압력과 공공기관의 고용·임금의 안정성의 관련에 대한 연구를 제안함

